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 내정

국방부, 상반기 軍 대장급 인사 발표... 육참총장에 서육·공군참모총장에 원인철 등 5명 단행

“능력 위주 인재 등용에 중점”

육군참모총장에 서육(57·육사41기)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이 내정됐다. 50년 만에 비(非)육사 출신 참모총장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과적으로 육사의 아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8일 “정부는 오늘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행된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포함한 대장급 인사는 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관심을 모은 육군참모총장에는 서육 합참 작전본부장이 대장 승진과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 서육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육군 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등을 거친 육군 내 최고 작전통으로 꼽힌다.

육군 최고위직에 사상 처음 비(非)육사 출신이 임명되느냐가 관심사로 꼽혔다. 현 정부 들어 군 요직에 해·공군과 비육사 출신이 대거 중용되는 파격 인사의 연속이었다. 국방부 수장



정부는 8일 상반기 대장급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서육 육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이상 내정자).

은 해·공군이 번갈아 맡았다.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도 공군과 비육사 출신에게 맡겨졌다.

이에 따라 군내 기득권을 허물기 위해 비육사 출신이 육군총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서육 중장이 내정되면서 ‘육군참모총장=육사’라는 전통은 유지됐다.

육사 배제가 뚜렷한 상황에서 육군총장까지 비육사 출신이 임명될 경우 ‘군심(軍心)’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한 인사로 풀이된다.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58·공사32기) 합참차장(중장)이 승진, 임명됐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중장 진급 후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

령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합참차장 등 요직을 두루 겸임했다.

공중작전 지휘능력과 군사전문성이 탁월하고,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작전적 식견과 인품을 두루 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최병혁(56·육사 41기) 육군 참모차장(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남영신(57·학군23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중장)이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됐다.

최병혁 연합사부사령관 내정자는 육군 감찰실장, 5군단장 등을 역임했고 합참 해외파병과장, 미 육군대학원 과정, 연합사 지구사 계획과장 등 연합작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자는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후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으로 취임해 안보지원사 개혁과 조기 안정화 등 지휘능력과 조직관리능력이 검증됐다.

오는 12일 전역하는 정진규(57·해사39기) 해병대사령관 후임으로 내정된 이승도(55·해사40기) 국방부 전 투준비태세검열단장(소장)은 해병대 연평부대장, 해병대 교육단장, 해병대 부사령관 및 참모장 등을 지낸 작전·교육 분야의 전문가이다.

대령 시절 연평부대장으로 2010년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 자주포 대응 사격을 지시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낸 전력도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해 군 내에서 신망이 두둑하고 올바른 인품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열 및 기수, 출신 등 기존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출신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뉴스

“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해야”

두세훈 도의원, 건의안 제안

전북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8일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4가지 법률개정(1)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늦어도 4월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지만 여야갈등으로 인해 국회과행이 계속되면서 차질과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안전교육부세율(이하 ‘소교세’)을 상향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소교세 인상효과가 총원인력 인건비의 실제 소요액에 못 미치고 개인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의 기타경비와 지역 현안수요에 따른 자체 총원인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아 가



득이나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두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락 없이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송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지원확대를 위한 국가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정부가 소방안전교육부세율을 2022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현장 소방인력 확충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정당을 떠나 적극 협조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3개국 모두 정부가 추진 중인 ‘신(新) 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국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문 대통령은 16~18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 간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18~21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 사브카트 미르지야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1~23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심조마르트 토크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신 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또 두 나라 관계의 호혜적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 대통령, 5개 부처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

통일부 김연철·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등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5개 부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에 앞서 이

날 오전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진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지난 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

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재가하면서 세 장관의 공식 임기는 시작된 상태다.

이번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으로 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방미(訪美) 전인 오는 9일에는 2기 내각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견례 성격의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뉴스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

평화당 김광수 의원, 법안 발의

최근 문화·체육계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서훈(敍勳)을 취소시키고 관련 금전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8일,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비롯해 문화·체육계에서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03년



육관문화훈장을 비롯해 2004년 보관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고은 시인 역시 지난 2002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고,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을 지냈던 오태석 연출가 또한 지난 2014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여받은 서훈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비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받는 인물의 추천을 배제하고 있는 정부포상지침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성 관련 범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서훈 대상이 되는 형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